

5·18구묘역 성역화 사업 윤곽...지하공간 활용 역사관 신설

광주시 중간보고회...활용 계획 보니

예산 98억→209억으로 2배 증액
스토리·콘텐츠 갖춘 추모공간으로
역사관에 카페·전시관 등 들어서
추모관 수요 감안 2040년계 신설
관리동 철거, '추모의 벽'으로 활용
건축기획 용역 후 실시설계 추진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뿔뿔히 흩어진 구묘역을 시민친화공원으로 만드는 '성역화 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광주시는 최근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사업' 건축기획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전반적인 공간 활용 계획을 세웠다고 14일 밝혔다.

구묘역은 애초 5·18 희생자 묘역이었으나 1997년 국립5·18민주묘지 신설 이후 노후화와 콘텐츠 부족, 국립5·18민주묘지와 연계성 부족 등으로 시민 발길이 끊겼다. 시는 이 공간을 개선해 스토리와 콘텐츠를 갖춘 추모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13차례에 걸쳐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5·18유공자, 시민사회단체 등 의견을 종합해 사업의 큰 틀을 잡았다.

먼저 광주시는 예산을 기존 98억원에서 20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100억원 규모 사업으로는 공원 조성비에 한계가 있어 국비를 추가 확보해 사업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출입구는 기존 3곳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 중 남쪽 출입구(민주의문 방향) 1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남쪽 출입구에는 75면 규모의 잔디 볼록 주차장을 조성하되, 버스 등 대형 차량도 진입할 수 있도록 재정비한다.

기존 주 출입구인 동쪽 출입구(국립5·18민주묘지 제2묘역 방향)가 있던 곳에는 역사관을 신설해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역사관은 지상 1층, 지하 2층 연면적 1096㎡ 규

모로 조성하며, 지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규모 역 풍경을 도드라지게 할 방침이다. 역사관에는 추모 공간과 카페테리아, 매점, 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역사관 전면에는 행사마당을 조성해 추모 행사 등을 상시 치를 수 있게 만들고, '전두환 비석'과 '힌즈페터 추모기념비' 등은 존치한다.

5·18 유공자, 민족민주열사 등 안장 대상 논란에 휘말렸던 '추모관' (납골당)은 공원 정비 이후 15년 뒤인 2040년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구묘역에 50여기 묘지 여분이 남아있는 점과 5·18 유공자들의 생애주기를 분석해 안장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추모관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추모관 수용규모도 기존 2500기에서 1100여기로 축소하고, 구묘역 북쪽 출입구 인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리실과 매점 등으로 활용되던 관리동 건물은 철거하되, 5·18 당시부터 있었던 건물로서 5·18 유가족들의 추억과 한이 서린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남쪽 벽만 철거하지 않고 남겨뒀 추모 메시지 등을 남기는 '추모의 벽'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유영봉안소와 사무동 사이 연결통로는 증축해 실내 공간으로 확장하며, 인근 장사면의휴게실은 철거 후 재건축한다.

건축기획 초안에는 박석마당, 조형물 설치 등도 제안됐으나 5·18 유공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길치레 없어, 오히려 추모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받아 철회하기로 했다.

효용성 논란을 안고 있는 국립5·18민주묘지와 구묘역 간 지하도로 개설안은 채광, 습도 유지, 침수 등 관리상 어려움 등으로 설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건축기획용역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광주시는 용역을 마치는대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실시설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 번 만들 때 알차게 내용을 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려 다양한 콘텐츠와 편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구묘역이 역사성과 상징성, 접근성 등을 두루 갖춘 시민 친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태 기자 yjyou@kwangju.co.kr



14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 구묘역의 일부 묘에 녹지 않은 눈이 쌓여 있다. 광주시는 구묘역의 노후 시설을 재정비, 콘텐츠를 추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죄 판결 2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현금 수거책 처벌 면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신용정보회사 업무로 알고 활동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따라 현금을 수거했다는 점에서 미필적이나마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적인 행위로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현금을 수금하면 일당 15

만원과 차비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안도군 한 도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65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지역 부동산 정보지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보냈다. 이 업체는 보이스피싱업체였지만, 이를 몰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코로나 19 때문에 비대면 채용을 한다고 속였다. A씨는 '서류전달 대행, 부동산 시장 조사 대행, 채권추심 대행, 기타 모든 업무 대행'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도 받았다.

A씨는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특정 장소의 우편함에 넣기도 하고 특정 건물과 주변의 사진을 찍어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신용정보 주식회사의 명의의 채권 추심 통지서를 전달하며 '이 과정'이라고 말하고 돈만 잘 받아 오면 된다고 안심시켰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묻는 질문에 사실대로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교묘히 속여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A씨가 받은 일당도 처벌을 감수할 정도의 액수라고 볼 수 없고 지인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자 스스로 일을 그만둔 점 등을 보면 범행 이후 범죄 연관성을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 '양복 뇌물 혐의' 이상의 함평군수 1년 6월 구형

건설업자에게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의 함평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연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888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광주지역 한 고급 양복점에서 구입한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 비용을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대납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군수가 건설업자로부터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후진적인 뇌물사건"이라며 "자백·진술 등의 증거로 혐의가 인정됨에도 이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도 단돈 1원짜리 하나 받아본 사실이 없다"면서 "양복 5벌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없으니, 유죄를 인정한다면 차라리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 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연락 말라 했지만 서로 일상 공유...스토킹까진 아냐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차례 이야기 하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지만, 서로 일상을 공유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판단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이던 B(여·57)씨와 2023년 1월 말게 결별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2월 B씨와 여자문제 크게 싸우고 2023년 1월 중순부터 별거를 했다. B씨는 A씨에게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재산분할 등을 이유 때문에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이후 B씨는 2023년 2월 20일 A씨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받은 뒤 A씨와 연락을 끊었다.

A씨는 3월 초 B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3번 누르기도 하고 3월 중순에는 B씨의 차량 와이퍼에 찍지도 남겨뒀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B씨가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전까지 서로 일상을 공유하는 문자를 한달 가까이 주고 받았고, A씨가 B씨의 집에서 한차례 자고 온 점, 재산 분할이 이뤄졌더라도 정리할 사안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가 2월 중순까지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아니었고, 찍지 내용도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를 달라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공포심을 느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